

트럼프, 관세 강화·이란 경고 재확인...中·北 언급은 없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서 “대법판결 유감...관세 더 세질 것” 입장 지지율·중간선거 압박 속 국정 성과 강조...외교 현안은 제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타격을 입은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법적 권한을 고려하면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게 그들에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대법원의 유감스러운 개입 이전에 협상한 것과 같은 성공적인 길을 따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대안”으로서의 관세 수단이 있어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 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핵무기 개발 중단을 관찰하기 위해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오는 26일 제네바에서 이란과 후속 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은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기 등 병력을 대거 배치해 놓은 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작년 6월처럼 이란을 다시 공습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과 협상하고 있다. 그들은 합의를 타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밀 단어(secret words)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이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 하나는 분명하다. 난 결코 세계의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어느 국가도 미국의 결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이미 유럽과 해외 미군 기지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곧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이 비핵화 등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필요한 이유를 열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난 가능한 때마다 평화를 추구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 맞서기를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우선순위로 지정한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또 서반구에서 미국의 안보와 우위를 복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고, 우리나라를 폭력, 마약, 테러리즘과 외국의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월말~4월초 직접 방문할 예정인 중국이나 북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국정연설은 대통령이 의회에 국가의 상태와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한 해 동안 우선해서 추진할 입법 과제와 대외 정책 방향을 알리는 행사로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작년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4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한 바 있지만, 전통적으로 1, 2월에 하는 국정연설은 집권 2기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 2년 차에 하는 국정연설은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하기 때문에 통상 대의 현안보다는 국내에서 관심 가질 내용을 주로 다룬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공화당이 오는 11월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내줄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 AI 정상회의서 청년 반라 시위...여야 공방

야당 조직원 8명 체포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최근 개최된 인공지능(AI) 정상회의장에서 야당 소속 청년들이 티셔츠를 벗은 채 반라 시위를 벌인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국제행사장에서 그런 시위를 벌여 나라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화적 시위를 문제 삼아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25일 인디아투데이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시위는 AI 정상회의 폐막 하루 전인 지난 20일 열렸다.

연방의회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 청년조직에 속하는 10명가량의 청년은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 마련된 회의장에서 티셔츠를 벗은 채 반라 상태로 행진했다. 그들은 “총리는 타협했다”는 글자가 적힌 티셔츠를 흔들었

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가 최근 미국과 한 무역 합의를 비판한 것이다.

일부 청년은 상체가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고, 시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온라인 공간에도 유포됐다.

경찰은 시위 직후 이들 젊은이를 체포하기 시작해 전날까지 8명을 체포했으며 범죄 공모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전날에는 INC 청년조직 대표인 우다이 치브가 경찰 신문 20시간 만에 체포됐다. 경찰은 치브와 기존에 체포된 이들을 대질해 시위 사전공모 여부와 시위에 사용된 티셔츠 제작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열린 뉴델리 AI 정상회의에 참석한 86개국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日 ‘무인점포’ 확산 주춤...수익·편의성 부족에 잇단 철수

일본 소매업계에서 미래형 매장으로 주목받았던 ‘무인점포’의 확산이 주춤하고 있다. 막대한 설비 투자비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이용객의 편의성이 떨어진다. 점포 발목을 잡으며 대형 유통업체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전략 수정에 나섰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온 그룹 산하의 슈퍼마켓 체인 ‘다이’는 최근 도쿄 내에서 운영하던 계산대 없는 매장 ‘캐치앤고(CATCH&GO)’를 폐쇄하고 무인 슈퍼 사업에서 철수했다. 카메라와 센서 등 전용 설비 비용은 막대한 반면, 전용 앱 등록 절차가 번거로워 이용

객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아마존이 지난달 말 ‘아마존 고’ 등 무인 매장 폐쇄를 결정하며 완전 무인화의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편의점 업계 상황도 비슷하다. 로손과 패밀리마트는 무인점포를 운영 중이지만, 장비 투자 부담으로 인해 구체적인 추가 출점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완전 무인’ 대신 기술을 통해 인력을 효율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 후 특별사면...3200명 석방

인권단체 “정치범 등 석방 더더”

베네수엘라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뒤 도입한 특별사면 제도를 통해 수천 명이 석방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의회의 특별위원회는 사면법 발효 후 나흘 동안 3200여명이 완전히 풀려났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압송된 뒤 죄수를 대규모로 석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압박 속에 도입된 이 법률은 반체제 인사들 비롯해 반역, 테러, 증오 확산 등 혐의를 처벌받은 이들을 신청받아 심사 후 사면하는 게 골자다.

사면법을 감독하는 호르헤 아라에사 베네수엘라 의원은 사면법이 지난 20일 발효된 이후 당국이 접수한 신청이 4203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청을 심사한 결과 가택연금 같은 제재를 받았던 이들 3052명이 완전한 자유를 되찾았고 다른 179명은 감방에 있다가 풀려났다고 설명했다.

인권단체와 정치범의 가족들은 사면법에 따른 석방과 제재 해제에 아직 더디다고 비판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있는 인권단체 ‘포로 페달’ (형사사건



베네수엘라 수감자 호세 다마스코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미란다주 과타이리에 있는 엘 로데오 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럼)은 사면법 발효 이후 석방이 확인된 정치범이 9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재 사면에서 제외된 232건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다며 사면 대상으로 보는 이들 600명 정도가 아직 감금 상태라고 덧붙였다.

사면법에서는 살인, 마약 거래, 군사 반란, 심각한 인권침해 등 죄를 저지른 이들은 예외 대상에서

배제된다.

마두로 정권은 2013년 출범한 이후 테러죄, 반역죄, 증오범죄 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비판을 억누르고 인권을 탄압했다는 논란이 휘말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압송하는 참수 작전 후 베네수엘라에 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비전을 언급하고 있다.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